

2013년 세계 경제 전망

금융위기와 재정위기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세계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었다. 재정위기로 정책수단이 제한되고, 신흥국의 성장동력도 약화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의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세계 경제는 회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2013년에도 세계 경제는 미약한 회복세가 나타나며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재정절벽을 피하더라도 재정 감축은 불가피하여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적완화의 효과보다 재정 감축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유로존의 경우 위기 대응을 위해 ESM 설립 등 방화벽 구축에 진전을 보였으나 재정위기와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다. 중국은 바오빠(保八)를 지키지 못하겠지만 5세대 지도부의 적극적인 내수 주도 성장정책으로 경착륙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1. 세계 경제

■ 성장력이 저하된 세계 경제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신청 이후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4년이 지났다. 금융위기로 2009년 침체되었던 세계 경제는 2010년 하반기 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금융위기 직후 G20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조체계가 작동했고, 각국이 확장적 재정 및 금융 정책을 사용하여 경기 부양을 도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1년 하반기부터는 재정상황이 부실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상황에 처하면서 더 이상 재정 수단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미국도 국가채무가 GDP대비 100%에 육박하면서 재정 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금리를 인하하여 현재 제로금리 또는 초저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를 인하하는 확장적 금융정책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금리 인하가 제약이 되자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형태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완화정책만이 사용가능한 경기부양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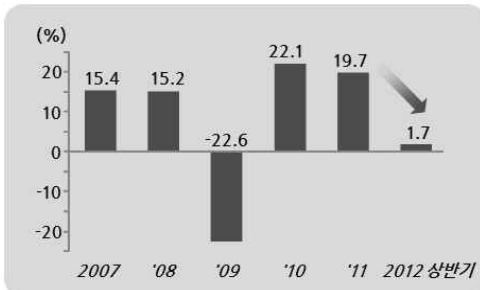
* 작성: 삼성경제연구소 김화년 박사(hnkim@seri.org)

이다. 그러나 양적완화가 연이어 시행되면서 그 효과는 점차 반감되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 직후 신흥국의 성장세는 크게 위축되지 않아서 신흥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버팀목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금융위기와 재정위기가 연이 으면서 신흥국의 성장동력도 크게 훼손되었다. 대부분의 신흥국 경제에서 선진국으로 의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선진국의 재정위기 지속으로 인해 신흥국 수출도 큰 충격을 받았다. 내수 기반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흥국의 내수는 열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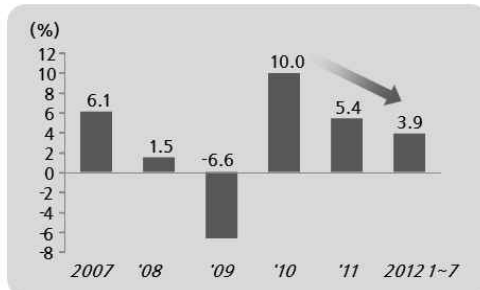
금융위기 직후만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의 성장력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불황이 길어지고 재정 문제가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까지도 정부의 보조 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재정위기로 인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어렵게 되었 기 때문이다. 또한 저성장이 장기화되며 기후변화협약에서도 온실가스배출 제한을 합 의하지 못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확보도 늦춰지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위축으로 인해 산업 측면에서 세계 경제의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 오히려 세 일가스 등 비전통에너지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비전통에너 지 개발은 미국, 캐나다 등 북미에서만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산업 측면에서 세계 경제 의 활력소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림 1. 세계 교역량 증가율 추이



자료: : WTO

그림 2.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 CPB Trademonitor

■ 심화되는 신흥국의 성장동력 약화

금융위기 발생 이후 세계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신흥국 경제의 부진이 나타나고 있 다. 특히 신흥국의 대표주자인 인도와 브라질의 경제성장세 둔화가 지속 중이다. 이는

세계 경제의 버팀목이던 신흥국 경제 전체의 부진을 의미한다. 인도는 高물가,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의 3중고에 시달리며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인도는 2012년 5%대까지 성장이 둔화되었다.

브라질은 총수출 중 對유럽 수출 비중이 21%, 해외차입 중 유럽계 자본 비중이 64%에 달하는 등 유럽의존도가 높아 유로존 불안의 고조로 인해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2012년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은 1%대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7.5%, 2011년 2.7% 성장에 비하면 성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신흥국의 대표인 인도와 브라질 모두 유로존 불안으로 인해 경기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인도는 유럽계 자금의 비중이 높아 현재 사상 최고 수준인 환율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물가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원자재와 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환율 상승은 수출 증대보다는 물가 불안을 초래한다. 브라질도 유로존 불안에 따른 원자재 수요 위축 및 가격 하락 등으로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인 원자재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브라질의 총수출 중 원자재 수출이 약 65%를 차지한다.

그러나 인도와 브라질 모두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이 제한적이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인도는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누적으로 정부지출을 확대하기 힘든 상황인데다가 유통시장의 개방 철회, 외국기업에 대한 소급과세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도 상실한 상태이다. 또한 브라질은 과거 하이퍼 인플레이션 경험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 등 정부의 정책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세계 경제는 2013년에도 저성장 기조 지속

금융위기 이후에는 언제 위기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즉 블랙스완(Black Swan)으로 인한 불안이 컸다. 위기가 발생하면 그 충격도 컸기 때문에 경제 활동 자체가 크게 위축되었다. 2012년 현재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불안 상황, 즉 그레이스완(Grey Swan) 상태로 바뀌었다. 하지만 세계 경제는 성장 회복을 위한 동력이 약화되면서 마땅한 해결책도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IMF 등 주요 기관은 유로존 위기 등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되자 2012년과 201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IMF는 2012년 10월에 발표한 201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4월) 전망치 대비 0.5%p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인사이트(GI)도

201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1.1%p 하향 조정했다. IMF는 201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012년 예상치보다 0.3%p 높게 전망하나, GI는 0.1%p 높은 3.1%로 전망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재정위기로 정책수단이 제한되고, 신흥국의 성장동력도 약화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의 부진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회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 따라서 2013년에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주요 기관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IMF				Global Insight(GI)			
	2012년 성장률		2013년 성장률		2012년 성장률		2013년 성장률	
	4월 전망	10월 전망	4월 전망	10월 전망	4월 전망	10월 전망	4월 전망	10월 전망
세계 경제	3.5	3.3	4.1	3.6	3.4	3.0	4.2	3.1
선진국	1.4	1.3	2.0	1.5	1.3	1.2	2.1	1.1
-미국	2.1	2.2	2.4	2.1	2.2	2.1	2.4	1.8
-유로존	-0.3	-0.4	0.9	0.2	-0.5	-0.5	0.8	-0.4
신흥국	5.7	5.3	6.0	5.6	5.7	5.0	6.3	5.2
-중국	8.2	7.8	8.8	8.2	8.4	7.4	8.6	7.6
-인도	6.9	4.9	7.3	6.0	7.2	5.1	8.0	5.8

주: 각 기관이 2012년 4월과 10월에 전망한 2012년과 2013년 세계 경제 성장률
 자료: IMF (2012),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2.; IMF (2012),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2.; Global Insight 4월, 10월 전망DB.

2. 미국 경제

■ 부양과 긴축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

미국 경제가 주택경기를 중심으로 회복 징후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활력은 미진하여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일부 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은 여전히 취약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규모 재정긴축이 예정되어 있어 미국 경제가 다시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하는 재정절벽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라 2013년 재정긴축 규모 7,280억 달러가 모두 실행될 경우 2013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1.3%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된다¹⁾. 그러나 긴축을 유예하면 당장의 성장률 급락은 피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 부진이 심화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미국 의회예산국

(CBO)은 2013~2022년 연평균 성장률을 긴축 유예 시 2.2%로, 긴축 이행 시의 2.6%보다 0.4%p 낮게 전망하고 있다.

그림 3. 2013년 시행 예정인 주요 재정긴축

(단위: 억달러, %)

분야	주요 내용	규모	GDP 대비
세금 인상	• 소득세율 인상, 급여세 감면 종료 • 의료보장세(오바마케어)	5,680	3.6
지출 축소	• 강제 재정지출 삭감(예산통제법) • 긴급 실업급여 프로그램 종료	1,600	1.0
총계		7,280	4.6

그림 4. 재정정책에 따른 성장률 전망



자료: Zandi, M. (2012), Navigating the U.S. Fiscal Cliff: Four Options, Moody's Analytics.

■ 경기 부양을 금융정책에 의존

미국은 재정을 확대하기 어려워 경기부양을 금융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는 성장 부진으로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현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12년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3차 양적완화(QE3) 정책을 발표했다. 경제상황이 상당히 개선될 때까지 매월 400억 달러의 주택저당증권을 시장에서 무기한 매입할 계획이다. 회수원금 재투자 및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등 기존 조치와 합해서 2012년 말까지는 장기채권을 매월 850억 달러씩 매입할 것이다. 아울러 초저금리 정책 기한을 기존 2014년 말에서 2015년 중반으로 연장하고 필요시 추가 자산매입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12월 FOMC에서는 4차 양적완화(QE4)로 불릴만한 조치가 발표되었다. Fed는 실업률이 6.5%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통화완화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2년 말 투입자금이 모두 소진되는 단기국채 매각을 통한 장기국채 매입 프로그램(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규모는 기존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같은 수준인 매달 450억 달러로 정해졌다. 기존의

1) CBO (2012), Economic Effects of Reducing the Fiscal Restraint That Is Scheduled to Occur in 2013.

오퍼레이션 트뤼스트가가 장기국채를 사들이는 대신 단기국채를 매각해 시중에 풀린 돈을 흡수했던 반면 2012년 12월 발표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은 중화장치가 없다. 따라서 Fed의 장기 국채 매입 자금이 그대로 시장에 풀리게 될 것이다.

특히, 2012년 12월 FOMC에서는 실업률, 인플레이션 등 구체적인 지표를 통화정책에 연동시키는 역사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실업률이 6.5%를 웃돌면 인플레이션이 2%를 넘지 않는 이상 제로금리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따라서 양적완화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강화되고, 주택가격 상승이 점진적으로 소비와 투자 증대,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추가 양적완화도 성장세 둔화를 막기에는 역부족

그러나 재정긴축 효과가 양적완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보다 커서 2013년 미국 경제의 성장률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긴축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은 있지만, 재정긴축 자체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재정절벽을 막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나 재정비탈(Fiscal Slope) 정도의 긴축은 피할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10년간 4.4조 달러 규모의 재정긴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이 현재의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국가신용등급 강등, 투자자 신뢰 악화 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Marple(2012)은 긴축 규모를 약 50% 축소해도 성장률이 1.5%p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재정긴축이 실행되기 전에도 재정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2012년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0.5%p 하락과 약 4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²⁾. 또한 양적완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이어서 재정긴축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모기지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10월 11일 현재 3.39%)이고, 금융권 유동성도 풍부하여 추가 양적완화조치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2) Marple, J. (2012). Searching for a Detour around the Fiscal Cliff, TD Economics.

3. 유로존 경제

■ 1단계 방화벽 구축

위기 차단을 위한 유로존 차원의 방화벽 구축이 진전되었다. 2012년 6월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위기대응 해법 중 1단계인 방화벽 구축에 성과를 보인 것이다. 위기대응 해법은 방화벽 구축(1단계) → 은행동맹(2단계) → 재정통합(3단계)로 구분 가능하다. 여기서 1단계 방화벽 구축이란 ECB(유럽중앙은행)의 新국채매입 프로그램 국채매입 신청, 긴축 및 구조개혁 의무 수용 등의 요건 충족 시 국채를 무제한 매입 채택(9월 6일), ESM(유럽안정화기구)의 출범(10월 8일) 등을 말한다. 특히, ESM은 한시적 구제 금융 기금인 EFSF(유럽재정안정기금)를 대체하는 상설기구로 ‘유럽판IMF’로 불린다. 이러한 1단계 방화벽 구축으로 위기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장 내 불안감이 진정되고 있다.

그림 5. 유로존 위기의 대응해법



자료: 김득갑 외 (2012). 유로존 위기 진단과 기업의 대응. CEOinformation 868호. 삼성경제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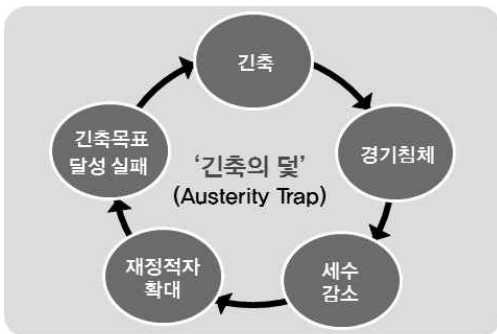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 방화벽의 원활한 작동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은 회원국의 국채매입 요건인 ‘긴축 및 구조 개혁 의무’ 이행 차질로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는 국채매입 신청국이 긴축 및

구조개혁의 이행 실패 시 국채매입을 중단하게 되어 위기가 증폭될 우려가 남아있다. ESM도 역할 수행에 필요한 요건 은행 직접지원을 위해서는 은행 감독권한 통합이 전제되어야 하고, 국채매입을 위해서는 긴축 및 구조개혁 요구를 회원국이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감독권한 통합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ESM이 원활하게 작동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자본금은 7,000억 유로(납입자본금 800억 유로)이나, 실제 가용자원은 5,000억 유로로 재원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은행 직접지원과 국채매입에 한계에 처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회원국의 채무상환능력 약화가 지속되는 한 위기국면은 201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긴축의 덫으로 인해 경기침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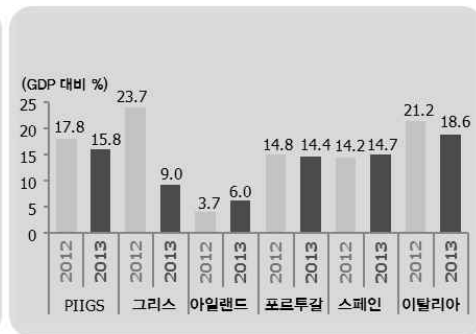
재정위기국은 소위 ‘긴축의 덫(austerity trap)’에 빠져 있어 긴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재정적자 축소가 어려운 상황이다. 긴축의 덫이란 ‘긴축→ 경기침체→ 세수 감소→ 재정적자 확대→ 긴축 목표 달성 실패→ 긴축 추구’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또한 2013년에도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채무상환 부담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긴축목표 달성 애로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그림 7. 재정위기국의 만기도래 국채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2013년 5개 재정위기국(PIIGS)의 만기도래 국채 규모는 총 5,127억 유로(GDP 대비 15.8%), 이탈리아는 3,030억 유로(GDP 대비18.6%), 스페인은 1,573억 유로(GDP 대비14.7%)로 전망³⁾되고 있다. 따라서 방화벽 가동으로 최악의 위기는 모면하겠지만,

회원국의 채무상환능력 약화로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 측면에서도 재정긴축 및 금융정책의 한계로 인해 2013년 유로존 경제는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지출 축소, 세금 인상, 실업수당 및 연금지급 축소 등 유로존 국가의 긴축정책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⁴⁾은 4.1%(2011년) → 3.3%(2012년) → 2.6%(2013년)로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경제에 부담스러운 적자 수준이 지속될 것이다. 또한 금리인하 여력의 한계와 국채매입을 통해 풀린 유동성 흡수정책(불태화)⁵⁾으로 금융완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3. 중국 경제

■ 바오빠(保八)가 붕괴된 2012년 중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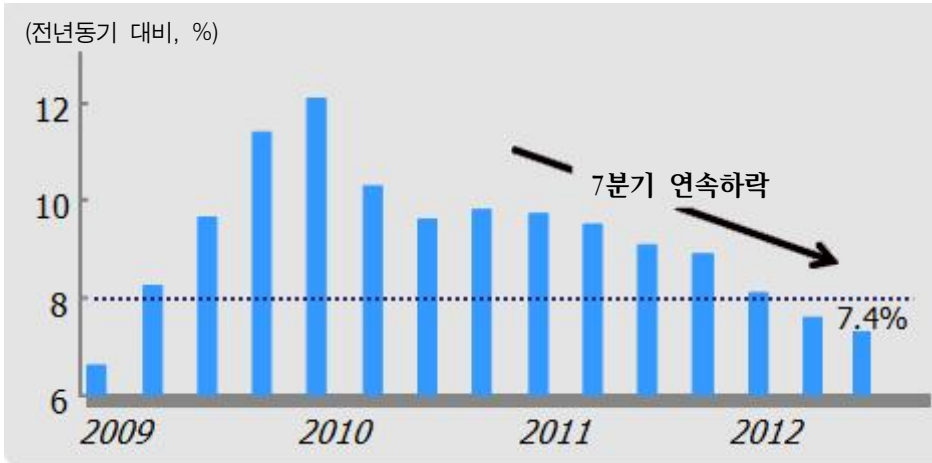
2012년 중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둔화로 성장률이 8%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1년 1/4분기부터 7분기 연속 하락하면서, 2012년 2/4분기에는 7.6%로 불문율처럼 여겨지던 8%를 하회했다. 2012년 3/4분기에도 7.4% 성장에 그치면서 둔화세가 지속되었다. 유로존 경기 침체, 미국 성장 둔화 등으로 중국의 수출 증가세가 對선진국 수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둔화되었다.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2010년 31%에서 2011년 20%로 2012년 1~8월에는 7%로 하락했다. 2012년 9월과 10월에는 수출 증가율이 반짝 반등을 했지만 11월에는 다시 이 크게 하락했다. 수출 부진과 높은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와 소비증가세도 위축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Eurostat

4) IMF (2012), Fiscal Monitor – Taking Stock: a Progress Report on Fiscal Adjustment, October.

5) 불태화란 국채매입으로 풀린 유동성이 유발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ECB의 보유 자산 매각, 민간은행의 ECB 예치금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을 말함.

그림 8. 중국 경제 성장률



자료: CEIC

■ 소비 주도의 성장전략에 힘입어 경착륙 가능성은 낮음

세계 수요 부진으로 수출과 투자의 빠른 회복이 어려워 2013년에도 8%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이 금융위기에 이어 재정위기를 겪고 있어 중국 수출의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의 총수출 중 약 70%가 선진국으로의 수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 상승, 위안화 절상 등으로 수출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선진국의 압력 등으로 위안화는 지난 8년간 23% 절상되었으며, 2007년 이후 명목임금은 연평균 15% 상승했다. 수출 부진으로 투자 둔화가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투자과열로 인한 물가 및 부동산 가격 불안을 경계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투자확대정책에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2013년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낮다. 수출 부진에 따른 성장 둔화를 만회하기 위해 소비 증대에 힘쓰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경제 성장의 질적 수준 제고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소비 주도 성장을 위한 개혁’을 추진 중이다.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를 정점으로 하는 중국 5세대 지도부의 등장으로 도시화 등 소비 주도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또한 2012년 지도부 교체로 다소 미뤄졌던 투자가 2013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9. 소비 주도 성장을 위한 개혁의 주요 내용



자료: 신장목 외 (2012), 최근 경제현안 진단, CEOinformation 870호, 삼성경제연구소.

2013년 외환시장 전망

2013년도에는 글로벌 달러가 상대 통화 별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선진국 별로 양적완화 경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미국이 재정절벽의 위기만 넘긴다면 미국 경제가 다른 선진국 경제보다 회복이 빠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반영한 펀더멘털성 달러 강세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로화나 엔화 등 선진국 통화들에 대한 반응일 것으로 보이며 아시아 통화들에 대해서는 반대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캐리트레이드나 엔캐리트레이드를 통해서 아시아 통화들의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주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나 중국 경제의 제한적 반등 가능성 등은 상대적으로 유로캐리트레이드의 활성화를 약화시키게 되고 2012년 4분기부터 상승세를 시작한 달러/엔 역시 상승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엔캐리트레이드의 규모 역시 시장의 기대 수준에는 미흡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로 인해 달러/원에 미치는 영향 또한 2012년보다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와 위안화 절상의 영향을 반영하면서 환율의 기본적 하락 추세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국의 개입 기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달러/원의 하락 속도를 둔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미 경제지표 호조에 따라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 중단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은 4분기 달러/원의 반등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2013년 달러/원의 거래범위는 1,030원~1,095원이 예상된다.

1. 유로/달러

2012년과 마찬가지로 2013년도 역시 유로/달러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큰 그림 상으로는 박스권 행보가 예상된다. 2012년의 외환시장을 관통한 대주제는 글로벌 경기부진에 대한 우려와 중앙은행의 정책적 기대감이었는데 유로/달러는 국제외환시장에서 그 어느 통화쌍보다도 이 요소를 적절히 반영하면서 1.20 달러대와 1.34 달러 사이에서 박스권 행보를 보여왔다. 2013년도에는 유럽 재정위기의 안정과 성장에 대한 우려가 서로 교차하는 가운데 미 재정절벽에 해소와 이에 따른 QE의 조기 종료 가능성 등이 어우러지며 기존의 박스권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작성: (주)외환선물 정경팔 팀장(kpchung@kebf.com)